

1년 걸친 동국대 내홍, 해결 실마리 찾나

12월 3일 동국대 이사 전원 사퇴 “사태 책임 통감”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들이 학내 혼란에 책임을 지고 사퇴를 선언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총장 선거부터 이어진 ‘동국대 사태’가 해결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동국대 이사회는 12월 3일 고양 동국대 일산병원에서 제297차 이사회 후 법인사무처를 통해 “현 이사장을 포함한 모든 임원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통감하며 전원 사퇴한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현재 단식과 농성 중인 학생, 교수, 직원, 동문 등은 즉시 단식과 농성을 그만두고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기 바란다”며 “만약 그러하지 않을 경우 전원 사퇴는 무효로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박현식 법인사무처 총무부장은 “이날 이사들은 김건중 부총학생회장의 단식과 동조단식 등으로 학내가 혼란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장시간 논의를 진행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이사회는 이사 전원 사퇴로 인한 학교 운영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점차적으로 새 임원을 선임해 이사회를 구성하고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결의에는 이 사장 일면 스님을 비롯해 성대, 미산, 지홍, 호성, 심경, 이연택, 김선근, 김기유 이사과 최대식 감사가 참여했다.

이사회가 1년 만에 전향적인 결단

을 내린 데는 교내 안팎의 단식 농성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10월 15일부터 대학본부 앞에서 단식을 진행하던 김건중 동국대 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은 오전 10시 경 건강이 악화돼 병원으로 후송되기도 했다. 그 뜻에 동조한 한만수 교수협의회 회장과 교수 2명도 24일째 단식 중이었으며, 교직원 1명도 18일째 단식을 이어오고 있었다.

이에 동국대 이사 임기 시작을 앞둔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이 11월

297차 이사회서 조건부 결의

단식 중단 및 이사 점진 사퇴

비대위 환영 “학교 발전 계기”

26일 이사 포기 선언을 했으며 이사인 미산 스님도 30일 “생명부터 살려야 한다”며 이사직을 사퇴하고 단식에 합류했다. 이날 동국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미항사 주지 금강 스님과 대홍사 일지암 주지 법인 스님도 김건중 부총학생회장의 단식 중단을 요청하고, 동국대 정상화를 촉구하는 단식을 시작했다. 학내에서도 문과대 학장 교수 전원이 보직을 사퇴하는 등 파장이 확산되자 종단 측에서 12월 1일부터 이틀에 걸쳐 16시간 동안 사태 해결을 위한 ‘학생원탁회의’를 열었지만 역시 결



단식 투쟁 중이던 학생의 응급 후송과 투신 예고까지, 일촉즉발의 위기까지 갔던 12월 어느날의 동국대 교정 모습이다. 팔정도 광장 내에 단식농성 중인 천막이 눈에 띈다.

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이사진들의 사태해결을 위한 사퇴 결의에 농성이 이어온 비상대책위 관계자들은 환영의사를 밝혔다.

30일부터 동조단식을 이어온 동국대 총동문회 측은 “조건부지만 서로 사태를 해결할 의지만 있다면 당연히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총동문회 회장단은 학생과 교수들이 더 이상 희생되기 때문에 동문

들이 나서 학생과 교수들을 설득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단식에 돌입했던 금강 스님과 법인 스님도 “그동안 단식과 투신선언을 한 두 학생이 극단행동으로 가지 않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함께 단식을 중단하고 다시 수행하던 곳으로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이사회에 동국대 총장 보광 스님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사들의 사퇴에도 총장 거취를 두

고 벌어진 동국대 갈등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다.

투신 의사를 밝히고 이날 잠적했던 최장훈 동국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장은 “이사들의 결정은 상당히 진전된 것”이라며 “학내 구성원들과 의견을 모아 학교가 발전되는 방향으로 이사회가 구성됐으면 한다. 총장 사퇴까지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대중공사 모토는 ‘적절’ 결의 후속 조치는 ‘글썸’

대중공사 추진위, 1일 100인 대중공사 인식조사 발표

백년대계 모토 87% 긍정

결의사항 이행 53% 부정

기관 신뢰도 교육원 ‘최고’

총회·호계원, 신뢰도 낮아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의 의제와 모토에 대해서는 적절했지만 후속조치 이행은 잘 이뤄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 추진위원회는 12월 1일 열린 ‘대중공사를 공사하다’ 좌담회에서 “대중공사에 대한 인식과 요구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10월 28일부터 11월 15일까지 이뤄졌으며, 조사대상에는 100인 위원회와 중앙총회의원, 중앙총무기관 소임자, 종단 출입 기자 등이 포함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중공사의 종단 혁신과 백년대계 모토는 적절했다’는 질문에 87.4%(매우 그렇다:27.4%, 그렇다:60%)가 부정적인 답변을 했다. 긍정적인 답변은 11.1%에 그쳤다.

‘대중공사가 종단 토론 문화 형성에 기여했는가’라는 질문에는 79.3%(매우 그렇다:17%, 그렇다:62.2%)가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종단 문제를 정직하고 투명하게 다뤘나’는 질문 항목에는 59.4%가 긍정적이라고 응답했다.

대중공사의 결의사항에 대해서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며, 이행은 충실히 이뤄지지 못했다는 평가가 다수였다.

응답자 중 74.6%(매우 그렇다:17.7%, 그렇다:56.9%)가 ‘대중공사 결의사항은 대체로 포괄적이지 추상적’이라는 응답했으며, 53.9%(매우 그렇지 않다:17.7%, 그렇지 않다:36.2%)가 ‘대중공사 결의사항 후속조치는 충실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또한 응답자 중 66.2%가 결의사항 이행을 객관적으로 점검·평가

할 제3의 평가기준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결의사항 이행이 종법적 강제력을 가져야 한다는 응답도 70.8%의 참가자가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100인 대중공사의 지속여부와 개선사항 등에 대해서는 ‘대중공사는 지속하되 구성, 의제, 진행방편, 모니터링 등 개선이 절제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53.7%로 가장 높았고, ‘제도권 중심을 벗어나 자율·독립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19.4%가 나왔다.

가장 개선돼야 할 점으로는 결의사항 후속조치(38.8%), 참여자 선정과 규모(20.3%), 의제 설정(18.8%) 순으로 나타났다.

종단 기구의 신뢰도도 조사됐다. 교육원의 신뢰도가 69.7%로 가장 높았으나, 반면 중앙총회는 55.7%가 호계원은 70.8%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중앙총회 신뢰도에 대해서는 비구 스님과 비구니 스님·재가자와는 인식 차이를 보였다. 비구 스님들은 60%가 중앙총회를 신뢰한다고 했지만 비구니 스님들은 60%, 우바세는 63.5%, 우바이는 55.5%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설문조사 분석을 맡았던 윤남진 NGO리서치 소장은 “100인 대중공사의 취지, 진행 과정, 운영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 응답을 보이고 있으나, 결의사항 이행, 참가자 구성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응답을 하고 있다”면서 “다만 대체적으로 대중공사가 계속돼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의하나 개선을 절제하고 있다는 점도 충분히 유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사를 분석하니 비구 스님과 다른 3부중, 비구니·우바이, 중앙과 기초 단체 등의 인식 차이가 존재한다”면서 “현존하는 다양한 인식과 요구의 차이들을 구성 및 의제 설정에서 구조적으로 반영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종교인 과세, 2018년부터 본격 시행

국회, 2일 소득세법 개정안 결의... 필요 경비 제외 稅 부과

조계종 “法 시행 준비할 것”
개신교계 “시기상조” 반대

종교인 과세가 2018년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1968년 종교인 과세 입법화 시도 이후 47년만에 성역이 깨지고 개세주의 원칙에 의거한 세금 집행이 이뤄진다.

국회는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종교인 과세를 명문화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재적의원 267명 가운데

찬성 195, 반대 20, 기권 50으로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스님들이 사찰에서 보시금을 받거나 법문, 의식 등을 통해 얻는 소득에 대해 일정 금액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국회가 결의한 세법 개정안은 정부가 제출한 ‘종교인 과세 방안’을 그대로 수용했다. 다만 정부의 시행 시기를 수정해 오는 2018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기로 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종교인 과세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세

금 부과시 소득 구간에 따라 필요경비 공제율이 차등 적용된다. 즉, 종교인들의 소득 수준에 따라 20~80%를 필요 경비로 인정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다.

필요 경비율은 연 소득 4000만원 미만은 80%, 4000만원~8000만원은 60%, 8000만원~1억5000만원은 40%, 1억5000만원 초과는 20%다.

종교인들은 세금을 낼 때 원천징수 여부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원

천징수를 하지 않는 종교인들은 종합소득세로 자진 신고가 가능하다.

또한, 종교계의 세무 조사 우려를 받아들여 방지책을 법에 명시했다. 조세소위는 법에 ‘세무공무원의 질문·조사 시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는 종교단체의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 중에서 종교인 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해 조사하거나 제출을 명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스님, 목사 등 종교인들에 대해서 지급된 장부만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종교인 과세 방안 처리에 대해 불교계는 원칙적으로 찬성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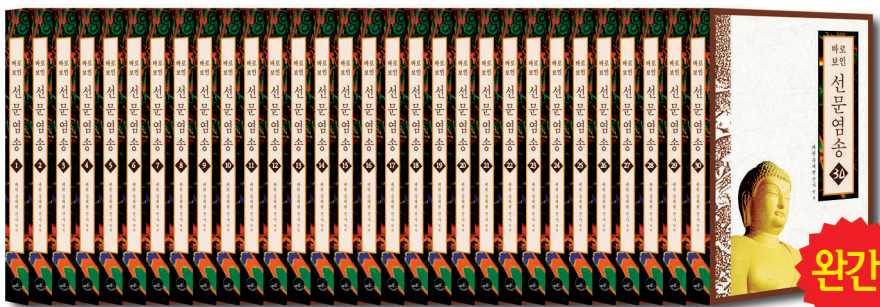
다는 입장이다. 조계종 기획국장 남전 스님은 “종단은 과세 정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 “2018년까지 유예기간이 있는 만큼 불교의 특성에 맞는 과세 정책을 요구하는 등 법 시행 준비를 착실히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개신교계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 중이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12월 2일 종교인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종교인 과세를 법으로 제정해 시행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의 큰 교회들은 지금도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면서 “법과 과세를 강제하기보다는 교회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기획특집 | 100인 대중공사 성과와 과제 12면

전강 대선사님 인가제자 · 대원 문재현 선사님 세계 최대 공안집, 선문염송 30권 드디어 완간!!



선문염송 30권, 15년만에 완간하다!!

부처님으로부터 역대 조사에 이르기까지 선문의 전 공안을 총망라한 세계 최대 공안집, 선문염송 전30권이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역저에 의해 15년간의 대장정 끝에 드디어 완간되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1,463칙 전 공안에 착어하다!!

1칙 도솔래의로부터 1,463칙 노파암자소각 공안에 이르기까지 모든 칙에 공안의 참뜻을 비추어 볼 수 있는 착어(着語)와 송(頌)을 더하였습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공안의 교과서!!

명안중사의 눈으로 꿰뚫은 바른 번역에 생활자재한 착어(着語)와 송(頌)을 더하였으니 공안을 바르게 참구하게 하는 나침반 역할을 하는 <공안의 교과서>라 할 것입니다.

· 도서출판 문젠 031-534-3373 | 010-4520-7963
www.zenparadise.com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서 - 74권 36종

- 바로보인 전등록 전5권 / 바로보인 무문관 / 바로보인 벽암록
- 바로보인 천부경 / 바로보인 금강경 / 세월을 복채로 세상을 복삼아 영원한현실 / 바로보인 신심명 /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5권
- 바로보인 선문염송 전30권 / 앞뜰에 국화꽃 곱고 복산에 찻는 희다
- 바로보인 증도가 / 바로보인 반야심경 / 선을 묻는 그대에게 1, 2권
- 바로보인 선가귀감 / 바로보인 범용선사 심명 / 주머니 속의 심경
- 바로보인 법성계 / 달다 / 기우몽독가 / 초발심자경문 / 방거사어록
- 실증설 / 하택신회대사 현종기 / 불조정책 3개국어판
- 바른 불자가 됩시다 /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 108진참회문 3개국어판
- 달마의 일할도 허락지 않는다 / 마음대로 앉아 죽고 서서 죽고
- 회두 3개국어판 / 바로보인 간당론 / 완전한 우리말 불공예식법
- 바로보인 유마경 / 실증설 5개국어판 /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3개국어판